



우크라이나 전쟁
12, 13, 16면

미국 금리 인상과
기업 부채 악화
6면

긴축은 불가피한가
11면

〈서부 전선 이상 없다〉
영화평
14면

미국 중간선거
15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강연

불평등, 능력주의, 공정

7~10면

이 사람이

물러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완전히 망가진다

관련 기사 2~5면

윤석열이 이태원 참사에 최대 책임 있다!

서울 한복판 변화가의 한 골목에서 156명이 꿈쩍 못 하고 목숨을 잃고 만 이태원 참사. 일상의 공간이 참사의 현장으로 순식간에 바뀔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태원 헬러원 축제에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었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통행 통제와 구급 대비만 했더라면 이 대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적어도 참사 4시간 전 최초 112 신고자의 절박한 SOS를 무시하지 않았어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이 점이 분명해지자 참사의 슬픔과 충격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로 바뀌고 있다.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공분이 매우 커지자 윤석열은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해야 했지만 하지 않은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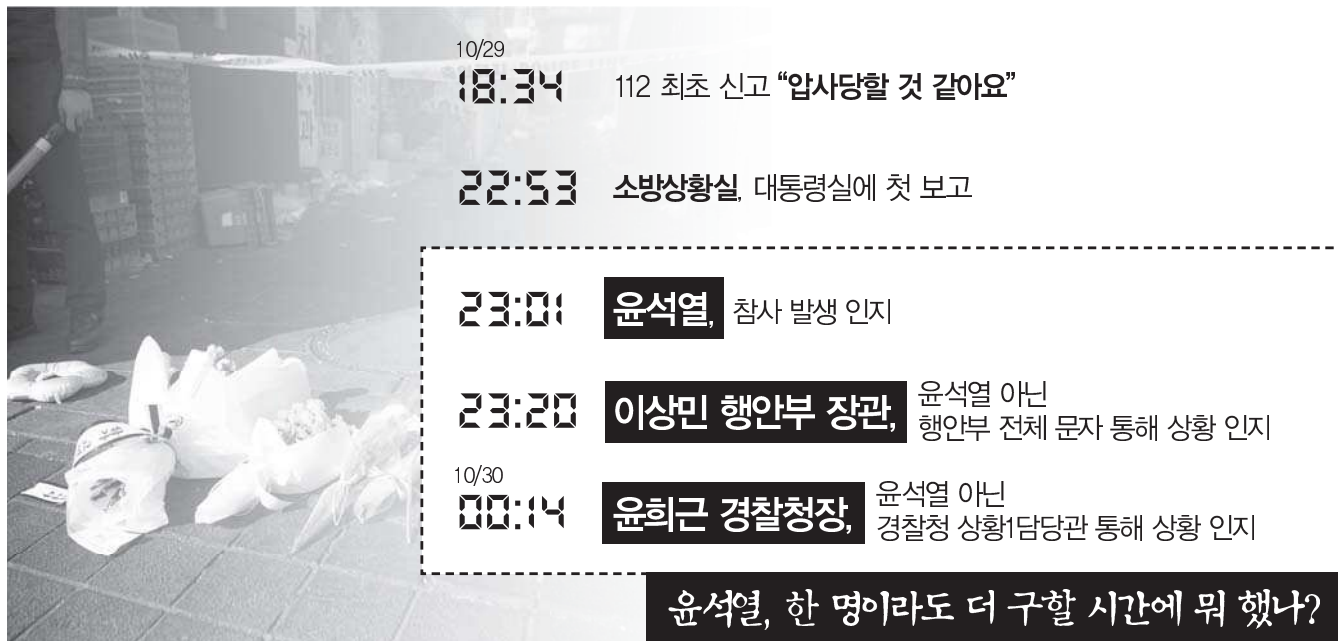
이번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성격 규정은 “대비할 수 없었던 사고”이다.

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윤석열은 “참사”가 아니라 “사고”로,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로 정부 용어를 통일시켰다. 유가족들과 평범한 사람들은 참사라는 말로도 차마 다 표현하지 못할 비통함을 느끼고 있는 순간에 정부 책임 회피적인 언어를 개발한 것이다.

2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국무총리 한덕수는 뻔뻔하게 변명했다. “주최가 없는 자발적 행사는 [정부의] 선제적 안전 관리가 어렵다.”

사실 참사 이후 윤석열의 온 신경은 ‘어떻게 하면 비판과 책임을 면하고 하루 빨리 이 상황을 넘길 수 있을까’에 가 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의 온 신경은
‘어떻게 하면 비판과 책임을 면하고 하루 빨리 이 상황을 넘길 수 있을까’에 가 있다.



10월 30일 윤석열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지만, 바로 다음 날 경찰청은 대통령실과 행안부 장관 보고용으로 의심되는 내부 문건을 작성했다. 경찰청은 이 문건에서 과거 참사 사례와 유가족·언론·사회운동단체 등의 동향 파악 등을 꼼꼼히 분석해 정부 책임론 확산 방지책을 다방면에 걸쳐 제시했다.

특히, 이 문건은 유가족을 회유하기 위한 보상금 문제 등 각종 대책을 제시하며 유가족과의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처럼 집단적 투쟁에 나설까 봐 우려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유가족과 정부 직원들을 1대1로 매칭해서 관리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저의가 의심되는 까닭이다.

유가족들을 뿔뿔이 흩어 놓는 것은 결코 유가족을 위한 일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유경근 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에 이렇게 강조했다. “가장 먼저 유가족분들이 한 곳에 편안하게 모여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각자 흩어져서 고통과 어려움을 혼자 견뎌 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참사 당일 대응

한편, 지난 2일 대통령실은 참사 당일 윤석열의 행적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참사 당일 윤석열은 오후 11시 1분에 상황을 인지했다. 112에 첫 신고가 접수된 오후 6시 34분으로부터 3시간 30분이 지나 현장은 이미 참혹한 상황이었다.

윤석열은 보고를 받은 후 20분 동안 “상황 점검”을 한 뒤 첫 번째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모든 관계 부처에서는

구급과 치료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이였다. 이 지시 내용은 11시 36분 언론에 배포됐고 직후 언론 속보가 쏟아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심쩍은 사실이 드러났다. 재난 대응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 이상민이 11시 20분 행안부 내 전체 문자를 통해서야 참사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힌 것이다.

경찰청장 윤희근은 심지어 윤석열의 첫 지시와 언론 보도가 나오고 38분이 지나 10월 30일 0시 14분에야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 재난이 발생하면 경찰이 가장 먼저 출동하는 기관 중 하나인데, 윤석열도 행안부 장관도 경찰청장과 소통하지 않은 것이다.

어쩌면 윤석열은 첫 보고를 받자마자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며 먼저 자신의 ‘신속한’ 대응 지시를 언론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시간에 형식적 지시와 언론 대응을 앞세운 것 아닌가?

꼬리 자르기

현재 경찰은 참사 현장의 CCTV를 확보해 당일 현장에 있었던 참가자 중에서 속죄양을 찾으려 하는 듯하다. 대참사의 책임을 한두 개인에게 떠넘기려는 경찰의 행태에 분노가 치민다.

한편, 참사 4시간 전부터 쏟아진 112 신고를 경찰이 무시한 사실이 드러나자 경찰청은 녹취록 공개 뒤 용산경찰서 압수수색 등 수사에 착수했다. 기껏 경찰서장(평검사와 같은 4급 서기관)을 속죄양 삼는 것은 케케묵은 꼬리 자

르기 수작이다.

10만이 넘는 규모의 군중 동선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대참사로 이어지게 만든 책임은 그보다 훨씬 앞선 데 있다. 주된 책임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지침도 없었던 정부의 수반, 윤석열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 정도 책임으로 책임을 묻기에는 참사의 규모가 너무 크다. 게다가 정부의 참사 대응도 대중의 분노와 저항을 단속하는 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와는 거리가 멀다.

이번 참사를 본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유가족은 이렇게 말했다. “그때도 불쏘시개 전동차를 만든 잘못된 법과 제도,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지 못한 국가의 책임에 집중해야 했는데 정부는 방화범과 승무원 수사에만 집중했어요. 개인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위험한 공간을 만든 국가의 책임이 더 큼니다.”

윤석열은 지난 8월 수재 피해로 1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을 때도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무한 책임”을 운운했다. 그러나 막을 수 있었을 참사는 반복됐고 윤석열의 입발린 말도 반복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가 보통 사람들의 안전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비극적으로 보여 준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정부 지도자 윤석열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승주



윤석열 퇴진 운동의 열기

이렇게 생각한다

윤석열 퇴진 요구는 정당하다!

고물가·고금리로 생계비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과 대출금리 인상 등 노동자 등 서민층의 삶을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낮은 것은 이런 공격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광범하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금융 위기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면서 공격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하려 한다.

이를 위해 윤석열이 의존하는 것은 법질서를 앞세운 권위주의적 수단들이다. 그는 독재 정권 시절부터 암약해 온 공안 수사 전문가들을 요직에 발탁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내세워 경찰력을 강화하고, (책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출판사 대표와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해군 병사를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했다.

급기야 이재명 대선 자금을 수사하겠다는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한 항의로 10월 22일 윤석열 퇴진 요구 촛불 집회에 5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다.

이 시위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장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노동운동과 주요 좌파 정당 지도자들은 안타깝게도 윤석열 퇴진 요구와 애써 거리를 두고 있다.

추수주의?

바로 이런 와중인 10월 29일, 이태원 압사 참사가 터졌다. 정부가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중의 분노가 광범하게 일었다. 특히, 희생자들 다수와 같은 또래의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

한 희생자 부모는 이렇게 분노했다. "총리 아들이 112에 전화했으면 수백 명의 경찰이 동원됐겠죠. 일반 사람들이 전화하니까 경찰이 무시해!"

윤석열은 참사를 보고받고도 즉시 책임 부처의 장들에게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사태 축소를 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정보·보안 경찰을 동원해 정부 책임론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사찰을 하고 내부 문건을 작성했다.

경찰 내부 문건이 폭로된 뒤 박석운 전국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는 그 내용을 부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민중행동] 내부 논의에선 이미 '퇴진'이란 워딩 자체를 쓰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고,] ...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애도와 진상 규명 필요성의 입장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정권퇴진 운동으로 발전시킨다는 발상은 완벽한 날조다.]"(《프레시안》 11월 2일자)

윤석열 퇴진 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좌파 단체들을 포괄하는 연대체가 정권 퇴진과는 "아예 기조가 다르다"고 선을 긋는 것은 이태원 참사 항의 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운동의 전진에 한계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지금 가장 반길 이가 누구일지를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다.

현재 민주노총은 윤석열 사과, 국무총리 사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은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파면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진보당은 윤석열이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참사의 책임 소재가 핵심 쟁점이 된 상황에서 노동당은 "모두가 반성하자"는 도덕주의자 같은 논평을 냈다.

정부 지도자인 윤석열을 정조준해 참사의 책임을 묻고 이를 퇴진 요구로 구체화시켜 대중 운동을 고무하는 것에 대해 개혁주의적 좌파들은 거의 준비가 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일부는 떨떠름해 하는 듯하다.

아마도 윤석열 퇴진 요구가 민주당에 유리할 뿐이라고 (선거적 관점에서) 봐서 인 듯하다. 당연히 정권 퇴진 구호는 "다음 정권은 누구냐?" 하는 물음을 피할 수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진보 염원 대중의 표를 꽤 가져갔다. 반면, 좌파계 정당들은 정치적으로 주변화돼 현재로서는 선거적 전망이 밝지 않다.

그러나 협소한 선거주의 관점이 아니라 계급투쟁을 발전시킨다는 관점에서 보면, 윤석열 퇴진 운동이 급속히 성장하는 것이 노동운동과 좌파 모두에 이로울 것이다. 퇴진 운동이 우파 정부를 강타해 여권이 동요하고 분열하면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분출하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이런 계급투쟁의 발전은 민주당으로서는 결코 내키지 않을 것이다.

좌파 일부는 동력이 뒷받침되지 않

**퇴진 운동이
우파 정부를 강타해
여권이 동요하고 분열하면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분출하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이런 계급투쟁의 발전은
민주당이 결코
내켜하지 않을 것이다.**

아 퇴진 요구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듯하다.

슬로건은 성취할 당면 목표를 내걸기도 하지만, 대중의 즉각적인 분노를 나타내 공격 대상을 집중화하는 것도 있다. 이런 정치 슬로건은 운동의 표적을 분명히 함으로써 투쟁과 정치의식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가령 세월호 참사 항의 국면에서 등장한 박근혜 퇴진 구호는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무능, 잔인할 정도의 무심함에 대한 즉각적 분노의 표현이었고, 박근혜에게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선언이었다.

반면, 2016년 10월 말 노동자연대의 제안으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박

▶ 4면으로 이어짐

이렇게 생각한다

윤석열은 왜 물러나야 하는가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가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에 극도로 무관심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기본적인 안전 조치만 취했어도 서울 한복판 거리에서 그 많은 청년들이 참담하게 희생되는 일은 피할 수 있었다.

정부의 정치와 행정은 보통의 청년들의 안전은 뒷전에 둔 채 마약·범죄 단속에 기울어져 있었고, 그날 다른 곳에서 열린 집회 통제에나 힘썼다. 그 속에서, 참사 전에 쏟아진 다급한 신고들도 무시했다. 그런데도 정부 각료들과 친정부 언론들, 소위 논평가들은 온갖 변명을 늘어놓기 바쁘다.

이런 정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까? 청년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처럼, 윤석열은 실로 “개노답”(구제불능)이다.

사실 이 점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들에서 이미 드러났다. 서민 대중의 삶을 고통에 빠뜨리고, 세계와 한반도를 더한층 위험천만하게 만들고, 기후 위기 심화에 일조하고, 차별과 억압을 강화하는 것들이다.

윤석열은 범국민적 퇴진운동으로 박근혜 정부가 쫓겨난 뒤 5년 만에 다시 집권한 우파 정부답게 ‘적폐’ 다시 쌓기를 하고 있다. 이 정부의 사명은 권력자와 기업주들의 이익을 위해 대중의 개혁 염원을 억압하고 각종 개악을 진척시키는 데 있다.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가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보여 줬다

대중의 삶을 위협하는 생계비 위기

윤석열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자”며 재정 긴축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안 그래도 부의 사다리 맨 꼭대기에 있는 대기업과 부유층에게는 앞으로 5년간 법인세·소득세·종부세를 60조 2000억 원이나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업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주 범죄에 대한 처벌도 낮춰 주겠다는 선물을 제공했다.

반면,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는 위기의 대가를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 금리를 계속 올려 가게 빚을 눈덩이처럼 키우고, 전기·가스·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최저임금을 비롯한 임금 억제로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다.

복지 예산 삭감으로 빈곤층도 늘고 있다. 올여름 폭우 속에 반지하 참사가 있었는데도 정부는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올해보다 5조 7000억 원이나 줄였다. 노인 일자리 예산도 1000억 원이나 삭감했다.

보통의 청년들의 삶도 나락으로 떨어졌다. 취업의 문은 더 좁아지고 양질의 일자리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청년 대책은 알량한 취업 서비스조차 민간에 위탁하고,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것이다.

‘악!’ 소리 나는 생활고에 한숨이 팍팍 나오는데도 정부는 노동자들을 더한층 쥐어짤 노동 개악, 연금 개악, 민영화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보건·사회서비스 후퇴

정부는 의료·돌봄·교육 등 복지 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고 한다. 이미 사회서비스의 90퍼센트 이상이 민간기관에 맡겨져서 비용과 서비스 질에 문제가 많은데도 말이다.

윤석열은 코로나 방역을 해제하고 팬데믹이 조용히 사라지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병원 인력 충원은커녕 되레 공공병원과 그 인력을 줄이려 한다. 겨울이 오며 7차 대유행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지만, 격리를 위한 유급휴가 지원 등도 나 몰라라 한다.

이런 상황은 코로나 위기 등으로 돌봄 부담이 증가한 보통의 여성들을 더한층의 고통으로 내모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없다”고 강변한 윤석열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그간 시행돼 온 알량한 성평등 정책조차 후퇴시키려 한다. 복지를 축소해 개별 가정에 부담을 떠넘기고 우파가 중시하는 보수적인 가족 가치관을 강조하는 것이다.

▶ 5면으로 이어짐

▶ 3면에서 이어짐

근해 퇴진 촛불 집회를 열었을 때 그것은 매우 실현 가능한 당면 목표로 제안된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그해 봄부터 대우조선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분열하고 있었고, 이런 여권의 내분을 뚫고 철도 등 공공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을 하면서 정권의 취약성이 가시화되고 있을 때 바로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이 터져 정부가 커다란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월호 운동이 박근혜를 정면 겨냥한 것이 결국 2년 뒤 박근혜 퇴진 운동의 밑거름이 됐다. 이런 기억 때문에 윤

석열은 이태원 압사 참사가 지도자 책임론으로 발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윤석열 퇴진 요구는 현 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불신과 불만을 드러내는 좋은 정치 슬로건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초점

한편, 윤석열 퇴진 운동 주도자들의 친민주당 노선은 그 운동이 확대되고 심화되는 데에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 같은 완전히 부차적인 문제가 시위의 2대 요구가 돼 있는 것

은 이 운동이 전면화되고 급진화되는 것을 방해한다.

게다가 김건희가 국정 공식 책임자도 아닐뿐더러, 그런 부차성 때문에 김건희 특검 요구는 언제든 민주당이 여당과 거래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논문 표절 같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많디많은 보통 사람들이 절박하게 겪고 있는 생계의 위기에 적절한 요구와 슬로건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윤석열 퇴진 시위는 급속히 악화하는 정치·경제 상황과 특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의 확산 속

에서 정치적 초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본지 독자들이 윤석열 퇴진 요구와 거리두기 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 주도권을 민주당 진보파에 내주고,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그 수준에 머물게 해서, 좌파의 정치적 존재감 약화라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뿐이다.

본지 독자들은 윤석열 퇴진 운동을 지지하며 윤석열 퇴진 요구와 더 넓은 쟁점, 즉 생계비 위기 문제와 이태원 참사,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등을 상호 연결시켜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내팽개치고 부자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만 열중한다

▶ 4면에서 이어짐

전쟁 무기 지원, 한반도 긴장 고조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즉, 미국과 나토) 측의 대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지난 6월에는 윤석열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그리고는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해 간접적 무기 지원을 하고, 심지어 체코를 통해 미사일을 지원할 것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확산에 일조해 세계와 한국을 모두 더 위험하게 만드는 짓이다. 이는 또한 한반도 주변 정세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중시킨

생계비 위기를 더 부채질하는 것이기도 하다.

윤석열은 또, (안보 불안정에 대비한다며)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의식하면서도 한미동맹을 강화해 왔다. 예컨대,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사드 기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해에서 대규모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 연이은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들은 북한을 자극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



사회 불만을 억압적으로 통제하려 할 때 우파들이 흔히 내세우는 구호가 '법 질서'다

법 질서 앞세운 권위주의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지속돼 온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 개악 공세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고 혈안이다. 경제, 지정학, 팬데믹, 기후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 조성될 불안정과 불만을 더 억압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이다.

법질서를 앞세운 권위주의와 군국주의(핵무장, 전술핵 배치 등 주장)가 그 수단들이다.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도 그 일환이다. 윤석열이 부패 척결, 정의 구현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정적 제거를 위한 것으로 결국 그 칼끝은 노동자 운동과 좌파를 향할 것이다.

사실 윤석열은 집권 초부터 국가기관 내부 단속에 가장 신경을 썼다. 친민주당 인사들을 밀어낼 뿐만 아니라 억압적 국가기관들을 더 잘 써먹기 위해서다.

윤석열은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경찰·검찰·국가정보원·국방부 등에서 격렬하게 숙정을 벌

였다. 간첩 조작, 밀정 등 추잡한 경력의 공안 수사 전문가들을 요직에 등용했다.

동시에 이 기관들은 단지 북한 관련 출판물을 출판하거나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수사들을 벌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 한다.

소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경찰력을 강화하고 심지어 총기 지급을 늘리고 있다.

이런 모든 악행들을 볼 때 윤석열 정부는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당장 물러나야 마땅한 정부다.

윤석열은 지금 커다란 대중적 반감에 직면해 있다. 취임 6개월 만에 정부 퇴진을 주장하는 수만 명 규모의 집회가 열렸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분노, 광범한 생계비 위기와 제국주의 간 전쟁 반대 정서를 연결시켜야 할 과제가 본지 독자들 앞에 놓여 있다.

뒷걸음질치는 기후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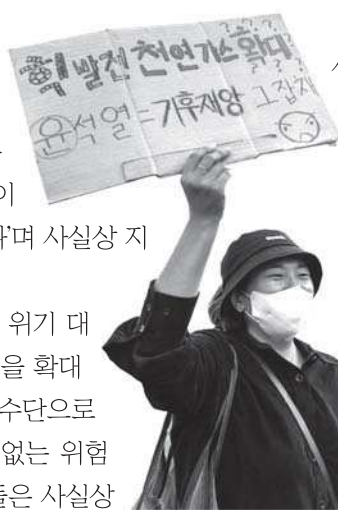
윤석열은 여느 우파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기후 위기 해결에 관심이 없다. 미국의 트럼프처럼 국제 협약을 깨 무시할 만큼 배짱이 크지는 않지만, 매우 부족했던 전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조차 '비현실적이고 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사실상 지키지 않으려 한다.

정부는 오히려 기후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핵발전을 확대하려 한다. 이는 어떤 수단으로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그들은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는 값싼 전기를 기업주들에게 공급하고 핵(무기) 기술을 개발하려고 핵발전엔 매달리고 있다.

정부는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을 대폭 늘리는 계획도 내놓고 있다.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졌으며 석탄 발전도 어떻게든 유지하려 한다.

지난여름 폭우와 태풍 힌남노, 식량 가격 폭등 등으로 평범한 서민층 사람들이 그토록 고통을 겪었는데도 기업의 이윤만 우선시하는 것이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더욱 악화되는 기업 부채 위기

강동훈

11월 2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또다시 기준금리를 0.75퍼센트포인트 올렸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4퍼센트로 올랐다. 미국 기준금리가 4퍼센트대로 오른 것은 2008년 1월 이후 약 15년 만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발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종금리는 이전에 예상한 수준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5퍼센트를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1퍼센트포인트 높아지면서 한국은행도 이달 말에 또 한 번의 ‘빅스텝’(기준금리 0.5퍼센트포인트 인상)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다.

한국보다 미국 기준금리가 높아질수록 원화 가치는 빠르게 하락하고,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빼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부동산 PF발 위기로 촉발된 한국 금융시장의 자금 경색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50조 원 이상의 자금 공급 방안을 발표하며 자금 경색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위기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또 올리면 자금 경색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특히, 증권사·건설사의 부도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자금 조달이 힘들어진 증권사들은 자산을 내다팔아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내년 1분기부터는 중소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도산하는 기업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

부동산 PF 대출 중단과 부동산 시장 급락으로 건설사들의 부도 위험도 커졌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4만 1604채로, 한 달 사이에 8882채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중소 건설사들뿐 아니라 태영건설·신세계건설·코오롱글로벌·효성중공업 같은 대기업 계열 건



올해 들어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건설사들의 부도 위험이 커지고 있다

설사들도 높은 부채 비율 때문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최근의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들은 자금을 구하지 못해 그야말로 고사 상황으로 내몰렸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기준금리가 3퍼센트로 인상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할 사업체가 86만 4123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그런데 기준금리는 이미 3퍼센트다. 중소기업들의 연쇄 부도 위험이 임박했다.

외화 자금 조달난

한편, 국내 금융시장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기업들의 외화 자금 조달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흥국생명은 11월 9일로 예정되었던 5억 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조기상환 하지 않겠다고 발표

해 시장에 충격을 줬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없는 채권이지만 보통은 5년 만에 상환하는 게 관례이므로 ‘사실상 5년 만기 채권’으로 인식돼 왔다. 흥국생명은 채권 상환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려 애썼지만, 이자가 너무 높아 자금 마련에 실패했다.

흥국생명의 외화 채권 상환 실패로 외화채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으며 한국 기업들의 신종자본증권 가격이 폭락했다.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외화 채권을 발행하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문제는 내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한국 기업들의 외화채권 규모가 약 249억 200만 달러(약 35조 3000억 원)나 된다는 점이다(NH투자증권 조사). 외화채권 발행 규모는 2015~2019년까지 100억 달러대에 머물렀지만, 2020년 이후 연간 300억 달러 수준까지 급증했다. 한국 기업들이 외화 부채를 갚기 어려워질수록 외환 위기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한국의 수출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미 지난달 한국의 수출액은 524억 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5.7퍼센트 감소했다.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 오던 수출이 2년 만에 감소한 것이다. 특히,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4퍼센트나 급감하면서 수출 전반에 타격을 입혔다.

가계 부채 문제도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미 1900조 원까지 불어난 가계 부채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4퍼센트를 넘어서면, 이미 7퍼센트대에 진입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의 최고 금리는 9퍼센트까지 오를 것이다.

지난해에 4억 원을 4퍼센트 금리로 빌린 경우 월 이자 부담은 약 133만 원이지만, 대출금리가 9퍼센트까지 오르면 월 이자는 약 300만 원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의 부동산과 기업·가계 부채의 위험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대폭 올리면 금융 불안정이 더욱 심화돼 결국 외환 위기로 발전할 수도 있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금만 올리면 그것은 그것대로 외화 자금 이탈 등으로 외환 위기가 터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미 중소 증권사·건설사들에서는 구조조정과 해고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경기 침체와 기업 부채 위기가 심화될수록 이런 공격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공산이 크다.

이윤 보호를 위한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벌어진 생계비 위기와 구조조정·해고에 맞서, 금리 인화와 부채 탕감, 일자리·임금 방어를 위한 저항이 일어나야 한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한국
금융시장의 자금 경색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평등, 능력주의, 공정

평등을 원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글은 11월 1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에서 한 알렉스 캘리니코스 의 발제와 정리 발언을 녹취한 것이다.



영상 보기

먼저 헬러원에 끔찍한 참사를 겪은 한국인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이른바 공권력이 보통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심한지를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평등을 다룬 제 책을 번역해서 출판한 책갈피 출판사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책의 영문판은 2000년에 출판됐습니다. 여러 면에서 굉장히 오래 전이죠.

당시는 경제적으로 보면, 예컨대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여전히 전진·확장하던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당시는 ‘제3의 길’이 부상하던 시기였습니다. ‘제3의 길’은 시장 경제와 사회 정의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 독일 총리 게르하르트 슈뢰더 등이 이런 주장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여러모로 변했지만, 제 책의 기본 논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미안작



언뜻 보면 자본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춰 보면, 사실 경제적으로 자유는 없고 불평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르주아 혁명의 이상과 모순

첫째 요지는, 평등이라는 이상은 1640년 영국 혁명, 1776년 미국 독립 혁명,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등 위대한 부르주아 혁명의 시기에 강력한 정치적 이상으로 제기됐다는 것입니다.

평등이라는 이상은 급진적인 해방의 가능성을 제시해 줍니다. 예컨대 1776년 7월에 작성된 유명한 미국 독립선언문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됐고 생명권·자유권·행복추구권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 모순이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남성만을 가리키고 여성은 배제됐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토머스 제퍼슨은 버지니아의 노예 소유주였습니다. 그는 흑인 노예들을 결코 평등한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죠.

문제는 단지 제퍼슨의 인종차별만이 — 그것도 분명 문제지만 — 아닙니다. 마르크스가 《자본론》 1권의 첫 장들

에서 밝히듯, 경제 체제로서의 자본주의는 모순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자본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듯합니다. 모두가 평등한 주체로서 시장에 참여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춰 보면, 사실 경제적으로 자유는 없고 불평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본가와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하는 거래를 떠올려 보십시오. 언뜻 보면 둘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장 행위자입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팔고

자본가는 그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평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노동자가 가진 것은 오직 자신의 노동력뿐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살기 위해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판매해야만 하고, 그것도 자신이 착취당하는 조건으로 판매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처럼 자본주의의 표면적 평등 이면에는 불평등이 있습니다.

▶ 7면에서 이어짐

능력주의에 대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의 비판

둘째 요지는, 이런 모순이 대략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시대에 어떤 형태를 취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이 과정은 제 책보다 나중에 나온 토마 피케티의 《21세기의 자본》에 매우 잘 묘사돼 있습니다.(피케티에 관해서는 뒤에서 더 다루겠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평등에 관한 사상을 발전시킨 일단의 철학자들이 북미와 영국에서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로 불리게 되죠. 《정의론》으로 유명한 존 롤스, 로널드 드워킨, 아마티아 센, G.A 코헨 등이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은 급진적인 평등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이 특히 비판하는 대상 하나는 바로 능력주의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부르주아 주류 담론에서는 평등이 능력주의와 동일시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능력주의에 따르면, 지위·부·권력의 불평등이 능력으로 정당화됩니다. 지위의 불평등한 분포가 재능의 불균등한 분포를 반영한다는 것이죠.

이런 관념의 문제점 하나는 완전히 허구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 영국에는 국가 지도자가 둘 있는데요. 한 명은 국왕 찰스 3세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을까요? 얼마 전에 엄마가 죽어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다른 한 명은 최근에 총리가 된 이룬 바 '선출된 정치인' 리시 수낀입니다.



자본주의 지배자들 이들은 능력보다 세습과 특혜, 부정 부패로 부와 권력을 축적했다

수낀은 찰스 3세보다도 더 부유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부자가 됐을까요? 근면 성실하게 일해서? 절대 아닙니다. 억만장자 인도인의 딸과 결혼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능력주의의 현주소입니다. 한국에도 이런 사례는 차고 넘칠 것입니다.

평등주의 철학자들은 이런 지적에서 멈추지 않고 능력주의라는 개념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능력주의의 전제는 '어떤 능력이 뛰어나면 이를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롤스는 바로 여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재능이 있다고 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고 말이죠.

가령 제가 타고난 유전자 덕분에 달리거나 수학을 잘한다고 해 봅시다(물론 실제로는 둘 중 어느 것에도 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제가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제 유전자가 그렇게 구성된 것일 뿐이죠.

또, 수낀처럼 제 부모님이 저를 좋은 중등학교와 대학교에 보내 준 덕에 금융가에 취직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 봅시다. 그 역시 제가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논증에 기초해 롤스는 재능의 분포가 "도덕적으로 임의적"(롤스의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재능 여부에 따라 어떤 대접을 받거나 받지 못할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롤스는 마르크스

가 《고타 강령 비판》에서 제시한 것과 비슷한 논지를 전개합니다.

이런 논증을 통해 평등주의적 철학자들은 '심층적 평등관'이라고 부를 만한 급진적인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잠재력을 만개시킬 기회를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하는 사회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논의는 좋은 말입니다만,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자유주의자라는 것이죠.

사회주의자인 코헨 정도를 제외하면 이 철학자들은 모두 심층적 평등이 자본주의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오류입니다.

토마 피케티와 불평등

이 대목에서 피케티가 보여 준 것을 살펴봅시다.

피케티는 부의 불평등에 주목합니다. 피케티가 많은 연구와 방대한 통계를 통해 보여 준 바는, 20세기 중반부터 적어도 유럽에서는 부의 불평등이 줄었다는 것입니다.(불평등이 줄었다는 것이지 평등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피케티는 이렇게 불평등이 감소한 원인 중 하나로 제2차세계대전이 몰고 온 혼란과 파괴를 지목합니다. 지

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듯, 폭탄을 마구 투하하면 많은 부가 파괴되죠.

그리고 제2차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복지국가가 발전해 부가 어느 정도 재분배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계 최대 자본주의 경제 대국인 미국에서는 그런 재분배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1970년대부터는 재분배가 역전돼, 제1차세계대전 이전 수준의 불평등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신자유주의가 자본 축적의 장애물을 모두 제거하고 세법을 바꿔서, 특히 부자들이 더욱 부유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케티는 평상시 자본주의에서는 갈수록 부의 불평등이 커져서 부익부 빈익빈이 강화된다는 일반 법칙을 제시했습니다.

피케티가 제시한 이 법칙은 다소 기계적입니다. 피케티는 자본주의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경제적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계급투쟁의 구실을 간과합니다.

이 점에서 데이비드 하비가 옳은 지적을 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자본가 계급의 힘을 복원하는 프로젝트였다고 말입니다.

즉, 미국의 레이건이나 영국의 대처 같은 정치 지도자들이 영국의 광원 노조나 미국의 항공 관제사 노조 같은 조직 노동자 집단에게 커다란 패배를 안겨 주고 계급 세력 균형을 다시 자본가에게 유리하게 되돌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모순과 계급투쟁

마르크스의 저작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논의를 마르크스는 다른 형태로 제시합니다.

《자본론》1권에서 마르크스는 노동계급 궁핍화가 자본 축적의 절대적 일반 법칙이라고 지적합니다.

마르크스는 왜 노동계급을 출발점으로 삼았을까요? 노동계급이 가치를 만들고 따라서 자본가들의 이윤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는 임금이 높은 낮은 노동자의 처지는 자본이 축적되는 것에 비례해 악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대목에서 마르크스는 절대적 궁핍화와 상대적 궁핍화를 구분했습니다.

절대적 궁핍화는 노동자의 임금과 소비 수준 자체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뜻합니다.

마르크스는 이 절대적 궁핍화를 특히 “산업 예비군”, 즉 실업자나 반(半)실업상태의 노동자 그리고 오늘날 ‘불안정 노동자’로 불리는 집단의 존재와 결부시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 축적 과정 때문에 이런 집단이 계속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상대적 궁핍화란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상승할 때조차 노동자가 창조한 가치에서 자본가들이 챙기는 몫이 더 커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생활 수준이 하락하지는 않더라도 더 심하게 착취당하는 상황인 것이죠.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런 [절대적·상대적 궁핍화] 과정이 매우 뚜렷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여 년 동안, 특히 2008~2009년 국제 금융 위기 이후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 하나는, 국가가 금융 시장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부자들이 소유한 자산의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는, 제 오랜 동료이자 동지였던 크리스 하먼이 말한 “자본의 내적 한계와 외적 한계” 모두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내적 한계란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한 위기로 치닫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 경향은 2007~2009년 국제 금융 위기 이후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자본의 외적 한계란 우리가 속해 있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연을 자본주의가 점점 더 파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계급 임금이 높은 낮은 노동자의 처지는 자본 축적에 비례해 악화된다

그리고 지금은 내적 한계와 외적 한계가 서로 갈마들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팬데믹은 자연 파괴의 사례인데, 그 와중에 2007~2008년에 시작된 경제 위기 역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이래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는 훨씬 격렬해졌습니다. 특히 이 위기는 지난 2년 동안 물가 급등으로 표현됐습니다.

현재 이에 대응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금융 시장에 값싼 돈을 풀던 정책을 중단하고 금리를 급격하게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해서 실업률을 높이고 노동자들에게 더 낮은 임금 수준을 강요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계급 전쟁입니다. 이로써 저들은 임금을 억제해서 이윤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자본가들은 이번에도 자기가 일으킨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이 치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계급 전쟁은, 팬데믹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 간 전쟁이 절대적 궁핍화를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유일한 해결책은 노동계급이 집단적으로 투쟁해 기업주들과 그들의 체제에 맞서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단결시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제거해야만 이 끔찍한 체제에서 우리 자신과 지구를 해방시키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평등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 10면으로 이어짐

왜 사회는 불평등한가?
왜 평등이 중요한가?
평등의 기준은 무엇인가?
어떻게 평등을 이룰 것인가?



평등 새 번역

불평등과 능력주의를 극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지음 | 이수현 옮김
268쪽 | 15,000원

세계적 마르크스주의 석학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불평등과 빈부 격차 문제를 깊이 파고든다.

저자는 존 롤스 등 평등주의 철학자들이 남긴 통찰을 흠뻑 인정하면서 평등 이상을 실현하려면 왜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혁명이 필요한지 설득력 있게 분석한다.

불평등을 이해하려면 왜 계급 관계에 주목해야 하는지, 평등을 이루면 과연 자유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지, 능력주의는 과연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지 등의 논의도 흥미롭다.

책갈피

전화 (02) 2265-6354
홈페이지 chaekgalpi.com

페이스북 facebook.com/chaekgalpi
인스타그램 instagram.com/chaekgalpi_books

▶ 9면에서 이어짐

발제자 정리

매우 흥미진진한 토론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훌륭한 주장을 해 주셨는데, 특히 마지막 발언에 많은 공감을 표합니다.

정말이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는 자유와 평등을 대립시키곤 합니다. 그래서 평등 사회가 되면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당 지령에 똑같이 따르는 사회가 될 것처럼 묘사하죠.

그러나 사실 자유와 평등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평등은 단지 돈의 불평등이 아니라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돈이 권력을 가져다 주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극소수의 대기업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돼 있습니다.

예컨대 트위터 사용자들은 일론 머스크라는 제멋대로이고 가학적인 억만장자가 트위터를 인수해 표현의 자유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독일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아도르노가 잘 표현했듯, 평등한 세상에서는 두려움 없이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소수자 우대

그래서 저는 소수자 우대 정책에 관해 말씀해 주신 분께 동의합니다.

우파가 소수자 우대 정책을 공격하는 이유는 그 정책이 흑인 같은 집단이 겪는 특별한 불리함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소수자 우대 정책은 특히 1960년대 미국에서 벌어진 거대한 투쟁, 대표적으로 흑인 평등권 운동이 남긴 성과입니다.

소수자 우대 정책은 불평등을 근절하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는

자유와 평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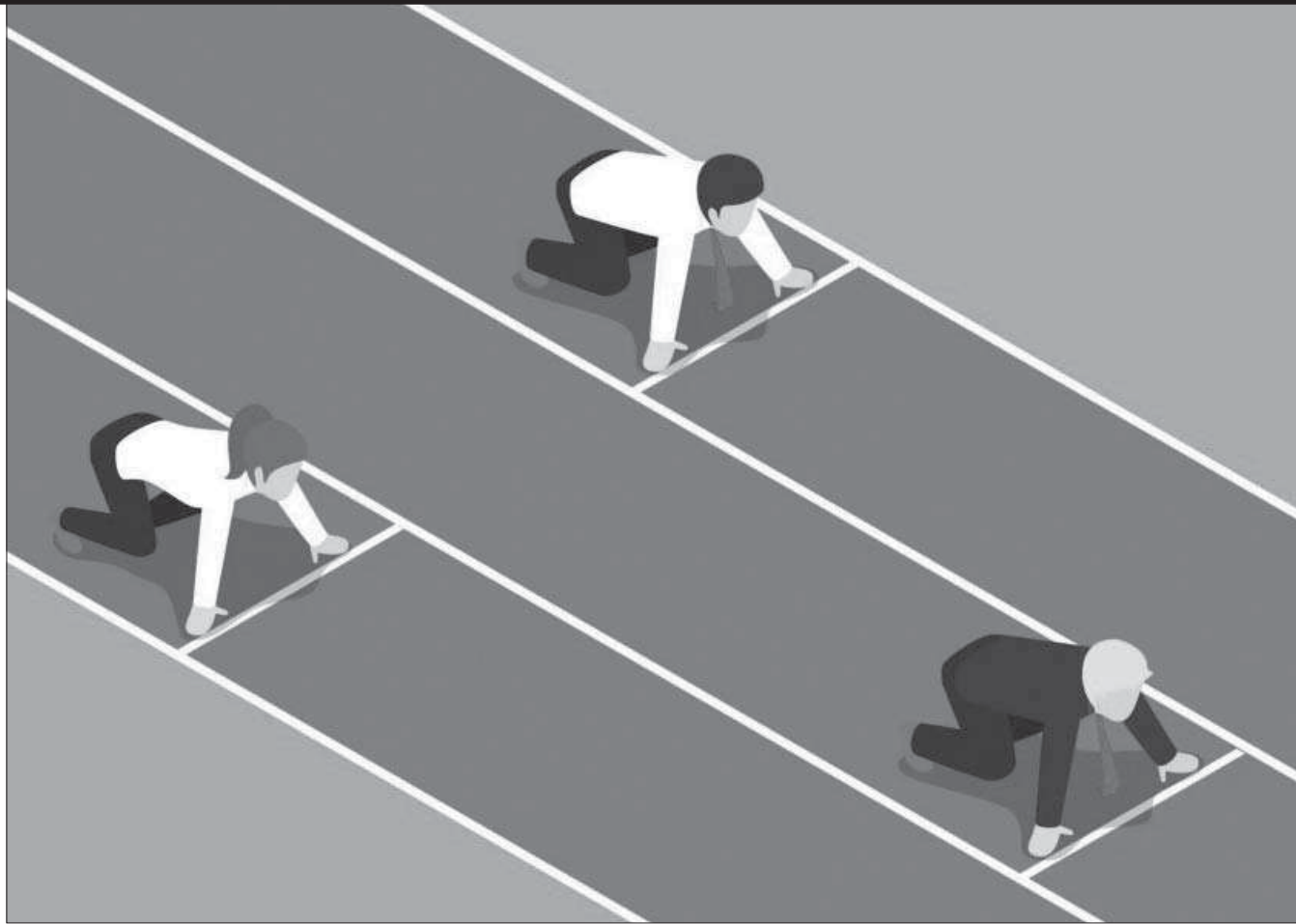
대립시키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자유와 평등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능력주의의 허구성 현실에서 사람들의 출발점은 매우 다르다

지는 못하지만 특정 부정의·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시도입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의 다수파인 극우가 이를 공격하려 하죠. 이들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듯 1960~1970년대 운동의 모든 성과를 무로 돌리고 싶어합니다.

능력주의

능력주의가 지금 상황보다는 나은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능력주의에는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 외에도 정치적 기획으로서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지적하셨듯, 실제 현실에서 사람들의 출발점은 개인마다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정해집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 아이가 삶에서 성공을 거둘 능력은 그 아이가 아직 태아일 때 어머니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도 일부 달려 있습니다. 사회가 너무 불평등한 나머지 그 불평등이 처음부터 신체에 आरो새겨지는 것이죠.

그런 현실을 바꾸려면 출발점을 똑같이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의 상속을 철폐해야 할 뿐 아니라, 모두가 같은 위치에서 출발하는 단일한 평등주의적 교육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함의가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일단 부를 대대적으로 재분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자본가들이 ‘괜찮아, 우리 아이들도 다른 모든 아이들과 똑같이 경쟁시켜 줘’, ‘우리가 죽으면 우리 재산도 다 가져가’ 하고 말할까요? 정말로 그렇게 믿으신다면 제

게 따로 연락 주십시오. 미국의 브루클린 대교를 아주 싼 값에 팔아 드리겠습니다. 제 말은, 자본가들이 그럴 것이라고 정말로 믿으신다면 무슨 말이든 곧이곧대로 믿으실 거라는 말입니다.

능력주의를 그것이 표방하는 바 그대로 실행할 유일한 방법은 부자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럴 힘이 있다면 뭐하러 그 힘을 능력주의에 낭비해야 하겠습니까? 곧장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면 되죠.

금리 인상과 실업

금리를 인상하면 왜 실업이 증가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것도 더 비싸집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그 효과가 더 두드러집니다. 지난 15년간 경제 위기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갈수록 부채에 의존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금리를 올리면 취약한 기업이 더 많이 도산하고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돼 실업률이 높아집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더 낮은 임금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로써 물가 상승이 둔화하리라는 것이죠.

심지어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희생물이라는 개념을 고안했습니다. 희생물이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감내해야 할 실업률 수준을 뜻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임금과

하등 상관이 없고, 자연 파괴가 직간접적으로 생산 비용을 높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착취

마지막으로, 불평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착취를 이해해야 한다는 첫 번째 발언자의 주장에 완전히 공감합니다.

이 체제는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착취당한다는 것이 단지 자본가에게 이윤을 창출해 준다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동자는 착취당하기 때문에 힘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노동자가 자본가의 이윤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일손을 놓으면 자본가들은 이윤의 원천이 끊기게 되고, 경제가 (최소한 일부 부문이) 작동을 멈춥니다.

자본주의를 타도할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위대한 폴란드계 독일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가 말했듯, 자본주의의 사슬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곳에서 그 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에서 빠져나갈 길도 노동자들의 집단적 투쟁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것이 한국의 노동자연대, 영국의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노동자연대에 가입해서 함께 이 세상을 바꿔 봅시다.

통역 천경록



실질임금 대폭 삭감하려는 정부 규탄 공무원노조 집회, 7월 15일 정부서울청사 앞

권익이전

긴축은 불가피하지 않다. 복지를 위한 돈은 있다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겨라

윤석열 정부는 긴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늘어난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한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 부채는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편이 아니다. 2021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46.9퍼센트인데, 이는 OECD 평균인 125퍼센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정부가 기업주와 부자들에게 막대한 감세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을 봐도 재원이 없어서 긴축을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5년간 법인세 · 소득세 · 중부세를 60조 2000억 원이나 감면해 주려고 한다. 반면 내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4.6퍼센트 늘어나 57조 원에 이른다.

정부의 긴축 정책은 케케묵은 신자유주의적 성장 추구에 따른 것이다. 기업들에게 감세해 주고, 복지와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자를 해고하고,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해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이면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 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추경 포함)보다 6퍼센트 삭감하며 복지를 공격하고 있다. 울여름 폭우 속에 반지하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올해보다 5조 7000억 원이나 삭감했다. 노인 복지 성격이 강한 노인 일자리 예산도 1000억 원이나 삭감해 월 27만 원을

받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 6만 개도 사라질 예정이다. 지역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해 물가 인상 상황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이용하던 작은 할인 혜택조차 없애려고 한다.

정부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복지 삭감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력 감축 정책으로 공공기관 350곳은 인력 6735명(전체 정원의 1.5퍼센트) 감축 계획을 제출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첫째 타깃이 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숫자를 이보다 더 늘려 공공부문 인력을 7퍼센트나 줄일 계획이다.

전기, 철도, 의료, 돌봄 등의 분야에서 민영화를 확대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안전 위협, 노동자 해고로 이어질 것이다. 또 향후 5년간 16조 원이 넘는 국유 건물과 토지를 매각해 부유층의 배를 불려 주려 한다.

실패로 드러난 긴축 정책

긴축 공격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각국 정부들이 기업들을 구제하는데 막대한 돈을 쓴 이후 특히 2010년경부터 세계 곳곳에서 벌어졌다. 많은 나라들에서 GDP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2009년을 기점으로 줄어들었다. 기업주들을 구하기 위해 진 빚을 갚으려고

노동자들의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다.

그 결과 평범한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영국에서는 긴축 정책 이후 2012~2019년에 사망한 사람이 애초 전망보다 33만 5000명이나 늘었다. 복지가 삭감되면서 난방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의료 서비스도 악화돼, 사망자가 늘어난 것이다. 복지 삭감 때문에 늘어난 사망자 수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보다 10만여 명이나 더 많다.

긴축이 가장 악랄하게 벌어진 곳은 그리스다. 그리스에서는 2010~2018년 사이 연금과 복지가 무려 70퍼센트가 삭감됐고, 임금도 30~40퍼센트 삭감됐다. 2009년에 90만 명이던 공무원 숫자는 2016년 67만 명이 됐다. 그리스는 빈곤층이 급증하고, 자살률은 무려 45퍼센트 늘어났다.

긴축 덕분에 부자와 기업주들은 돈을 봤다. 각국에서 빈익빈 부익부는 더욱 증가했다.

그러나 긴축 정책이 약속한 경제 성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스 GDP는 여전히 2008년보다 30퍼센트 적다. 세계적으로도 2008~2009년 금융 위기 후 경제 회복은 전후 어떤 침체에서도 느렸다.

더 길게 보면 긴축과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은 1980년대부터 추진됐지만

세계경제는 침체와 반복되는 불황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각국 정부들은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면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규모로 개입해야 했다. 2020년 코로나19와 함께 심각한 위기가 벌어지자 각국 정부들은 공공지출을 대규모로 늘렸고, 재정 적자는 다시금 급증했다. 그러고는 그 대가를 보통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바로 긴축 정책이다.

긴축 정책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지만 약속한 경제 성장은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실험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긴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것이 정치 · 경제 권력자들의 계급적 이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정부들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계급에게 전가해 이윤 몫을 늘리려 한다. 지배자들은 ‘국가의 미래’, ‘다음 세대’ 등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지만, 진실은 완전 판판이다

실패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부인 긴축 정책은 한국에서도 이미 대중적 반감을 사고 있다.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초반부터 급락한 배경에는 노동자 등 서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는 긴축 정책에 대한 반감이 깔려 있다. 이런 반감을 고통전가 공세의 총책임자 윤석열을 겨냥한 대중적 저항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정선영

Q&A로 알아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실

Q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이 전쟁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됐지만,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을 배경으로 한다.

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군사 동맹 나토(NATO)를 확장해 러시아를 에워싸려 했다. 한편, 소련 붕괴로 혼란에 빠졌다가 이후 국력을 일부 회복한 러시아는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되찾으려 했다. 둘 사이에 있는 우크라이나는 그 과정에서 첨예한 패권 다툼의 장이 됐다.

우크라이나의 정치는 친서방·친러 세력으로 첨예하게 갈려 있었고(어느 세력도 우크라이나 대중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았고, 둘 모두 외세의 후원을 받았다), 두 제국주의 세력 사이에서 동요하다 2014년에 결정적으로 친서방으로 기울었다. 대중 항쟁이 일어나 부패한 친러 대통령을 타도했지만 정치적 대안 부재로 친서방 정치인들이 그 수혜자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러시아는 자국의 핵심 이익이 걸린 크림반도를 점령·병합했고, 이 일에 고무된 일부 친러 세력이 우크라이나 동부에 친러 정부를 세우면서 내전이 벌어졌다. 이번 전쟁은 이 내전·대리전의 연장이다.

서방은 우크라이나와 경제적·군사적 연계를 강화했고 이는 바이든 정부 들어 더 속도가 붙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김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 푸틴은 무력시위를 벌이며 우크라이나 나토 불가입 보장을 미국에 요구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응하지 않았고, 결국 푸틴은 침공을 감행했다.

Q 나토는 어떤 기구인가?

나토는 미국이 냉전 시절에 소련을 견제한다며 창설한 군사 동맹이다.

나토의 본질은 미국의 패권 기구다. 소련이 무너진 후 나토는 오히려 확장됐다. 나토 국가들의 군비 지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나토는 민주주의 수호자를 표방하지만, 1960~70년대에 회원국 그리스의 군사 독재를 용인했고, 지금도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등지의 억압적인 정권을 묵인한다.

Q 전쟁은 왜 장기화되고 위험해지고 있는가?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진



러시아 제국주의를 규탄할 뿐 아니라 서방의 제국주의와 그에 대한 협력에 반대하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5월 서울 도심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집회

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침공에 서방은 즉각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막대한 군사적·경제적 지원으로 대응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이용해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동맹국들을 결속하려 한다.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중국과 경쟁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려 한다.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파괴되고 수많은 우크라이나인이 죽어 나가는 것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푸틴도 서방 제국주의의 개입에 맞서 우크라이나 침공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방도 이에 뒤질세라 우크라이나에 더 강력한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강대국 간 직접 충돌이 벌어질 위험도 커졌다.

바이든과 푸틴 모두 당장 세계 대전을 벌이려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황의 논리는 사태를 위험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Q 핵전쟁의 위험은 얼마나 심각한가?

핵전쟁의 위험은 실존한다. 푸틴은 핵무기 사용이 위협이 “허풍”이 아니라 했고, 바이든은 “모든 옵션을 검토 중”

이라고 했다. 핵무기 사용에는 정치적 부담이 따를 테지만, 두 지도자는 자국의 위신을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말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려 할 것이다. 이미 나토와 러시아 모두 저마다 핵전쟁 훈련을 벌인 바 있다.

Q 서방의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정당방위를 지원하는 것 아닌가?

러시아는 제국주의적 이익을 위한 침공을 즉각 중단하고 철군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울 권리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서방이 이 전쟁을 러시아와의 패권 경쟁에 이용하고 상황을 위험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무기 지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전쟁 수행이 전적으로 서방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방은 이런 지원을 통해 전쟁의 목표와 성격, 지속 시간을 결정하고 있다.

예컨대, 3월 말 평화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입장은 (안보 보장을 전제로 한) 우크라이나 중립화와 러시아 군을 침공 이전 상황으로 물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4월에 미국은 푸틴을 전

범으로 지목하고 푸틴을 협상 대상으로 여기지 말라는 메시지를 줬다. 서방의 무기 지원에 고무된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제 크림반도 탈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전략적 요충지를 둘러싼 쟁탈전이자, 수많은 사람들이 덧없이 희생되는 소모전이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지원에 기대어 러시아를 패퇴시킨다 해도, 강대국 간 경쟁 체제 자체가 약화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는 그 갈등의 최전선이 될 것이고, 서방의 군사적 모험에 종속된 억압적이고 군사화된 사회가 될 것이다. 젤렌스키는 “거대한 이스라엘”이 향후 우크라이나의 모델이라고 말한 바 있고(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억압하는 군사화된 인종분리 국가다),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Q 그래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것은 결국 푸틴을 이롭게 하는 것 아닌가?

푸틴의 전쟁은 서방의 개입이 아니라 자국 대중의 저항에 의해 좌절돼야 한다. 우리는 푸틴에 저항하는 러시아인들을 지지하고 고무해야 한다.

서방의 개입은 푸틴이 러시아 내의 반전운동을 억압하고 ‘국민적 단결’을

▶ 13면으로 이어짐

흑해 곡물 수출 위기

기근과 죽음을 확산시키는 우크라이나 전쟁

10월 29일 러시아 정부가 흑해 곡물 수출 협정 참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협정은 지난 7월 유엔과 튀르키예가 중재해 체결됐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흑해 항로의 안전을 보장해 곡물 수출 상선이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시에 설치된 합동조정센터가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에서 곡물 수출 선박의 통행을 관리하고 있다.

언론들은 이 협정을 “한 줄기 빛,” “평화 협상을 향한 첫걸음”으로 묘사했다. 8월 1일 우크라이나 오데사항에서 레바논으로 향하는 곡물 수송선의 출항이 국제적인 뉴스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두루 알다시피 그 뒤 벌어진 것은 확전이었다.

러시아가 협정 참여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직후, 곡물 수출 선박 218척의 발이 묶였다. 아리프 후세인 유엔 세계 식량계획 수석 경제학자는 “수십 개 나라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협정 참여 중단은 우크라이나가 해상 드론과 공중 드론을 동원해 크림반도 내 세바스토폴항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마카로프 제독함)을 공격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더 극적인 성과를 거두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작전 계획과 정보를 제공해 왔다.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흑해함대 기함 공격에 대해 푸틴이 어떻게 나올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지만 미국과 나토는 개의치 않았다.

서방 정부들은 러시아가 빈국들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한다. 특히 미국 국무장관 블링



지난 8월 우크라이나 오데사항에 정박해 있는 곡물 수송선

컨은 중요 곡물 수출을 방해하는 행위는 전 세계의 식량난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럽연합도 비슷한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위선이다. 서방 정부들은 빈국의 식량 위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다.

위선

우크라이나 개전 직후 치솟은 곡물 가격으로 서방 다국적기업들이 실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지난여름 곡물 가격은 얼마간 진정됐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늦었고, 여전히 많은 나라들에 그 효과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인구의 4분의 1 이상(3억 5000만 명)이 기근에 허덕이고 있다(4월 5일 국제적십자사 발표).

유엔은 흑해 곡물 수출 협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수출된 곡물량이 950만 톤이라고 집계했다.

그러나 인도주의적 곡물 수송이 아니라 상업적 거래가 대부분이었다. 흑해 항로가 열린 후 수출된 곡물은 식량이 되는 밀보다 가축 사료나 바이오 연료 등에 사용되는 옥수수가 훨씬 더 많았는데, 이 옥수수의 대부분을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이 구매한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 필요와 충분한 영양 공급 문제가 제국주의적 경쟁을 위한 무기가 되고, 자본가들의 이윤 제단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고 있다.

러시아는 중단 선언 나흘 만에 협정에 복귀했다. 하지만 곡물 “전선”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다. 우크라이나가 흑해의 “안전 통로”를 이용해 공격하고 있다고 러시아가 의심하기 때문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흑해 항로를 다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협정 시한인 11월 18일 이후 협정을 연장할지도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

협정 체결 직전인 7월, 우크라이나

항구들에서 출항하는 선박들을 호위하려고 서방의 군함들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그런 주장이 다시 나올지 모를 일이다.

확전의 악순환

한편, 평범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악몽 같은 전쟁의 학살이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흑해함대 기함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10월 31일 러시아군이 키예프(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전역의 에너지 시설을 미사일로 공격했다.

이 공격으로 주요 도시에서 종일 전기·수도가 끊겼다. 키예프에서는 주민 80퍼센트가 물 공급을 받지 못했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35만 가구에 가는 전기가 끊겼다.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는데,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생활필수품도 없이 겨울을 나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다.

헤르손 등지에서는 교전국들이 겨울 군사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나토 회원국들은 겨울 전쟁에 필요한 장비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 시작했다. 캐나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요청한 겨울용 피복류를 지원하기로 했고, 영국도 동계 피복 2만 5000벌을 전달할 예정이다.

푸틴도 최근에 징집 예비군이 훈련받는 부대를 시찰하며 훈련 상황을 점검했다.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간 충돌이 확전의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인류의 미래는 더한층 위협받고 있다.

김인식

▶ 12면에서 이어짐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이다.

친서방 국가에 사는 우리가 러시아인들의 저항을 고무하는 최선의 방법은 서방 지배자들의 전쟁 관여에 반대하며 러시아인들에게도 자국 지배자들에게 맞서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Q 한국 정부는 이 전쟁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가?

한국 정부는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현재까지 8000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군수 물자, 의약품 등

을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지원했다.

한국 정부는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국가들에 엄청난 양의 무기를 수출했다. 그렇게 수출된 K-9 자주포 차체 등이 전장에서 쓰이고 있다. 또, 얼마 전에는 한국이 체코를 통해 무기를 공여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체코 주요 언론 등에서 나오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바라는 한국인

들은 그곳의 참상에 일조하려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도 반대해야 한다.

Q 전쟁 반대 운동이 커 보이지 않는데 소용이 있을까?

역사에 남은 거대한 반전 운동들도 처음에는 소수의 노력에서 출발했다. 미국의 유명한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도 첫 집회는 수백 명 수준에 불과했고 “수년간의 노력 끝에 대중적 운동으로 발전했다.”(놈 촘스키).

제1차세계대전이 낳은 저항은 유럽

에서 혁명의 물결을 일으켰지만, 전쟁 초에는 오로지 극소수의 혁명적 좌파만이 자국 정부의 전쟁 노력에 반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이 달린 문제가 됐다. 인류를 재앙으로 이끌고 있는 강대국들의 각축전에 반대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는 것이 중요하다.

11월 26일에 열릴 행동은 그런 운동을 건설하는 디딤돌이 돼야 한다.

이원웅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workersolidarity.org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subs2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wspaper_org
@wspaper
노동자연대TV



wspaper.org/online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일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채널 바로가기

- 주 1회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회 영상
- 주요 시사 이슈를 10분 안에 명쾌하게! 시사/이슈 토크
- 135개 다양한 쟁점을 다룬 당시증 강연 음원
- 현장감 넘치는 노동자 투쟁 취재 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기후 정의, 그린뉴딜, 정의로운 전환, 탈성장과 핵발전 등 총 10회에 걸쳐
기후 위기 문제와 운동 내 쟁점을 다룹니다.

구독하시면, 지금 딱 보기 좋은 영상/음원을 추천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제이아 인쇄소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64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4 6



영화평 | 서부 전선 이상 없다 (2022 리메이크)

제1차세계대전에 대한 통렬한 고발장

반전(反戰) 소설의 고전 《서부 전선 이상 없다》를 새로 각색한 이 영화는 산업화된 전쟁의 참상을 온전히 보여 준다.

영화는 한 젊은 병사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다. 이 병사의 피투성이 군복은 수선해 재사용하려고 전선에서 후방으로 보내진 군복 무더기에 더해진다. 이 장면은 애국주의 열기에 휩싸인 채 전쟁 기계에 종알반이로 동원된 한 무리 젊은이들의 장면과 교차된다.

불길하게도 앞 장면에서 죽은 병사의 군복이 이 파릇파릇한 신병 중 한 명에게 지급된다.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 파울 보머다.

소설 《서부 전선 이상 없다》가 처음 영화화된 것은 할리우드에서였다. 이 영화에서는 미국 배우들이 독일 병사들을 연기했다.

이 영화는 1930년에 개봉했는데,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의 베스트셀러 독일어 소설이 출판된 지 1년 후였다. 그때만 해도 제1차세계대전 당시 참호전의 대학살이 아직 최근의 기억이었다.

왜 지금 리메이크된 것일까? 이번엔 개봉한 영화의 독일 감독 에드바르트 베르거는 영국 시사회에서 밝히기를, 유럽에서 민족주의 정당들과 나치 정당들이 부상하는 것이 영화 제작의 동기였다고 했다.

베르거의 이번 영화는, 제1차세계대전을 영웅주의적 관점에서 복권시키려는 샘 멘데스 감독의 최근작 <1917> 같은 시도들에 대한 통렬한 반박이다.

살아남기

이 영화에 영웅은 없다. 화염방사기·탱크 같은 신무기가 횡행하는 참혹한 현대전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의지만이 있을 뿐이다.

연출과 촬영 기법도 훌륭하다. 진창과 유혈 투성이인 전쟁 장면들과 숨막힐 듯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교차된다.

레마르크의 소설은 제1차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 당시의 애국주의 열기를 그리며 시작된다. 이를 베르거의 영화는 1917년 봄에 시작한 후 1918년 11월 평화 회담으로 건너 뛰는 것으로 각색했다.

다니엘 브뤼이 마이타스 에르츠베르거를 연기했다. 에르츠베르거는 이 회담의 독일측 대표로, 이후 암살당하고 훗날 나치에 의해 반역자로 악마화됐다.

에르츠베르거는 독일군이 굴욕적 평화 협정을 거스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깨닫고는, 정식으로 휴전을 선포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하지만 독일군 장군 하나는 독일의 항복에 격분한 나머지 자기 연대의 비참한 상태는 무시하고 종전 바로 몇 분 전에 최후의 자멸적 공격 명령을 내린다. 베르거의 각색은, 독일 극우가 그토록 떠받드는 “대반역” 신화*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다.

그러나 베르거의 각색이 낳은 문제들도 있다. 거의 3년 간 계속된 대학살 이후에도 여전히 입대를 열망하는 10대 무리들이 있었다고는 믿기지 않는다.

또 영화가 다루는 시간대가 1917년~1918년으로 바뀌었지만, 영화는 “볼셰비키”와 유럽을 휩쓰는 혁명의 파도에 관해서는 아주 최소한으로만 언급한다. 전쟁을 실제로 끝낸 봉기는 고사하고 독일군 내의 반란에 대해서도 일말의 언급이 없다.

고참 병사 크로프의 멋진 대사도 빠졌다. 소설에서 크로프는, 장군과 각국 지도자들만 나가 싸워야 하는 전쟁이 있다면 자신은 그 전쟁을 지지할 거라고 했다.

그럼에도 《서부 전선 이상 없다》를 각색한 이 영화는 산업화된 현대전에 대한 통렬한 고발장이다.

로디 슬로라크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829호 / 번역 김재현

이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다.

용어설명

“대반역” 신화

독일군은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후방의 사회주의 세력이 배신한 것 때문에 무릎 꿇었다는 주장



10월 1일 미시간주 워런에서 트럼프가 연 '미국을 구하라' 집회

사진 출처 Team Trump

미국 중간선거 바이든의 배신이 트럼프의 공화당에 기회를 주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바이든의 실패 때문에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개가를 올릴 기회를 얻었다.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노골적인 인종 차별주의자들이 득시글거리는 공화당은 하원의 다수당 지위 탈환을 고대하고 있고, 상원에서도 가능하면 그러길 바라고 있다.

민주당에게 의회 장악력을 빼앗고 나면 공화당은 자신들이 진보적이라 여기는 법안은 무엇이든 저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대리전에 대한 무기 지원을 늘리는 것과 같은 조치들에서만 바이든에 협조할 것이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는 거짓말을 계속 강변하고 있다. 트럼프는 2021년 1월 6일 극우의 국회의사당 난입도 옹호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새로 유대인 혐오적 언사도 더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 한 일들을 유대인들이 “너무 늦기 전에” 더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올렸다. 트럼프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훌륭한 복음주의자들”을 본받으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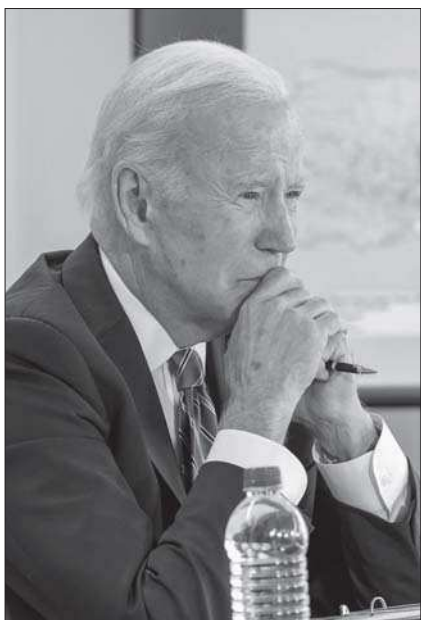
하지만 지금 공화당은 가장 반동적인 자들의 결집을 통해서 뿐 아니라, 보통 사람들을 대변하는 아웃사이더를 참칭하며 지지를 늘리고 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40년 만에 최고치다. 주택·식품·의료 비용이 급등하고 있다.

공화당은 국가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정부가 화석연료를 수입에 의존한 탓에 물가가 올랐다고 비난했다.

물론, 이들은 7700억 달러가 넘는 국방비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돈을 쏟아붓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지난 9월 NBC 뉴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 문제에서 공화당을 더 선호하는 유권자의 비율은 민주당보다 20퍼센트포인트 많았다. 민주당은 경제 문제에서 뒤처진 것을, 임신중지권을



임기 동안 술한 공약을 저버린 바이든

을 지키겠다는 공약으로 만회하려 한다.

선거 패배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바이든은 하원에서 민주당 의석이 늘어나면 가장 먼저 ‘로 대 웨이드’ 판결 유지를 명문화하는 연방법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은 청년들을 곁에 세워 놓고 “로 대 웨이드 판결 복원”이라고 적힌 배너를 걸고 그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신기루다. 중대한 쟁점에 편승하는 것이며, 임신중지권 공격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민주당이라는 막다른 길로 돌리는 것이다.

바이든은 진작에 그런 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소수가 법안 통과를 저지할 수 있게 해 주는 필리버스터 규칙을 없애 버릴 태세가 돼 있었다면 말이다.

그러나 바이든은 이에 대한 반발에 대응할 태세가 돼 있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선거에서 승리한다 해도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 직면할 것이다.

임신중지권 방어 운동의 초점을 민주당 투표에 두면 거리 운동은 속 빈 강정이 될 것이다. 법에 맞서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에서 힘을 빼는 효과를 낼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이후 ‘여성 행진’은 “분노의 여

름” 행동을 호소했다.

그러나 ‘여성 행진’은 단 한 차례의 전국적 행동도 벌이지 않았다. ‘여성 행진’은 10월 초에 주말 행동을 벌이긴 했지만, 운동을 민주당 투표로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바이든은 임기 동안 술한 공약들을 저버려 왔다.

바이든은 미국의 어마어마한 양의 핵무기를 폐기하기는커녕 감축하지도 못했고, 군비 지출을 대폭 늘렸다. 그리고 트럼프의 잔혹한 이민자 정책 대부분을 존치했다.

임신중지권에 대한 최악의 공격이 벌어진 것도 바이든 정부하에서다.

바이든은 인프라 재건과 기후 변화 대응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바이든이 약속한 재정 지출은 반토막 났다.

이런 모든 후퇴가 공화당에게 기회를 줬고, 극우 세력들의 힘을 키울 것이다.

대중의 생활 수준을 지키고 개선하고, 낙태권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파업과 거리 행동이지 민주당 꿈꾸니 쫓기가 아니다.

소피 스카이어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2829호 / 번역 김준호



체코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 윤석열 정부는 나토를 지원하지 마라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10월 2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안다며 이는 "우리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지목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이른바 살상 무기가 아닌 군수 물자만 지원한다고 해 왔다. 이번에도 윤석열은 살상 무기 공급 결정을 부인하면서도, 무기 지원 여부는 "주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런데 푸틴이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 한국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궁' 등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우회 경로로 주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9월 29일 체코에서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일간지인 <몰라다 프론타 드네스>는, 한국이 체코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3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전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체코의 한 방산 기업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궁'과 탄약 등을 구입해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것이라는 말이다.

또 그 구매 비용을 미국이 지불한다고 체코 언론은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때문에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라고 체코 언론은 지적했다. 한국이 체코 회사에 수출한 후 그 회사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더라도, 한국 정부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체코 언론 보도를 자세히 소개하며, 체코를 통한 미



신궁의 시험 발사 모습

사일 우회 수출은 그동안 제기된 포탄이나 탄환 공급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비판했다.

10월 1일에는 일본 <지지통신>도 '한국산 무기의 우크라이나 공여 가능성'을 보도했다.

지원

물론 윤석열 정부와 체코 정부 모두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전후 맥락을 보면 의혹의 눈길을 거둘 수 없다. 앞서 캐나다를 통해 한국산 포탄 등의 우회 지원이 시도된 바 있고, 폴란드로 수출된 한국의 K-9 자주포 차체가 우크라이나로 들어간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미사일과 무인기를 동원한 러시아의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정부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방공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신궁'은 관심

을 끌 만한 무기다. 신궁은 저고도로 침투하는 헬기와 항공기 요격을 목적으로 개발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다. 그리고 프랑스제 '미스트랄' 등 동급의 다른 서방 무기들보다 더 가볍고 성능도 좋다. 러시아의 공격헬기와 무인기를 상대하는 우크라이나군에게 신궁은 매우 필요한 무기인 것이다.

지난 4월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국에 '신궁' 등의 무기 지원을 요청했으나, 당시 한국 정부는 수락하지 않았다. 이후 미국이 다른 제안을 했는데,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보내는 게 곤란하다면 미국이 대신 받아서 우크라이나에 공여하겠다는 것이었다.

중간 경유지로 체코가 거론된 것도 미국의 이런 제안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체코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1억 6000만 달러어치 제공했다. 그리고 체코 정부는 미국과 방위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핵발전소 건

설과 방산 협력을 논의하는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국은 러시아를 경계하는 동유럽 국가들에 무기를 대거 수출할 기회를 잡았다. 물론 이는 미국 제국주의와의 협력 속에 이뤄지고 있을 것이다. 한국의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성능 좋은 무기들이 미국의 동유럽 동맹국들을 신속하게 무장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설사 이번에 한국산 무기가 체코를 거쳐 우크라이나로 가지 않더라도,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는 앞으로 계속 제기될 것이다. 폴란드·체코 등 동유럽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무기들이 우크라이나로 갈 공산도 크다.

그러나 한국의 무기 지원은 갈수록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나아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산에 일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그 지역에서뿐 아니라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러시아는 물론, 대만 문제 등으로 미국과 긴장 상태에 있는 중국의 경계심도 키울 테니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해 나토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김영익

함께 참가합시다

러시아는 철군하라!
미국과 나토는 개입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군사적 지원 중단하라!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도심 집회와 행진

일시: 11월 26일(토) 오후 4시

장소: 서울 종로 보신각 앞 (종각역 4번 출구)

문의: 010-7550-2131

온라인 토론회

이대원 참사, 왜 정부 책임인가?

11월 8일(화) 오후 8시
발제 김승주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와 국가를 묻다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저자

참가신청 bit.ly/1108-meeting

온라인 토론회

미국 중간선거 - 트럼프의 귀환?

11월 10일(목) 오후 8시 | 발제 김준호 <노동자 연대> 기자

참가신청 bit.ly/1110-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 가능) 🗨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